

## 변화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앙정치 대 지역정치\*

최준영 · 조진만 | 인하대학교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들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강하였던 시기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조진만·최준영·가상준(2006)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여 경험적 분석을 수행해본 결과, 지역주의가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직도 크기는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히 위축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최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인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약화 현상이 재·보궐선거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경험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지니는 설득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 한국, 재선거, 보궐선거, 중앙정치, 지역주의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 I. 서론

본 연구는 조진만·최준영·가상준(2006)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궐선거)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조진만 외의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조진만 외의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재·보궐선거(1993년 4월 23일~2005년 10월 26일, 사례수=58) 이후에 치러진 재·보궐선거(2006년 7월 26일~2011년 4월 27일, 사례수=26)를 분석대상에 새로이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조진만 외가 제시한 재·보궐선거 결정요인 분석모형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분석해봄으로써 과거의 연구결과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진만 외의 연구는 발표된 지 약 5년 정도의 시간 밖에 경과하지 않았다. 이처럼 발표된 지 그리 많은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반복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즉 이와 같은 반복적 연구가 필요한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이는 한국의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재·보궐선거에서도 재차 검증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있어서 지역주의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은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검증된 바 있다(박상훈 2001; 박찬욱 1993; 이갑윤 1997; 2002; 이남영 1998; 1999).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분석한 최준영·조진만(2005)은 이념과 세대균열이 등장함에 따라 지역균열의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강원택(2010)도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영·호남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영·호남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과는 다른 투표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지역주의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박명호(2010)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수도권 거주 386세대의 한나라당 지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토대로 수도권 거주 여부를 기준

으로 진보적인 386세대가 분화되는 특징을 보였다는 점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신지역균열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993년에서 2005년까지의 재·보궐선거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진만 外의 연구결과는 분석시기가 거의 대부분 지역주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던 지점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역주의의 변화상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조진만 外의 연구결과는 후술하겠지만 지역주의 현상을 반영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강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의 약화 현상이 재·보궐선거에도 재현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2005년 이후의 재·보궐선거 결과를 업데이트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약 반복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조진만 外의 원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지역주의가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조진만 外의 재·보궐선거 결정요인 분석모형을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즉 이 절에서는 재·보궐선거 결정요인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 경험적 통계분석모형, 데이터의 특성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3절에서는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기존의 분석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뒤 이 결과를 원래의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결과가 원래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제4절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함의와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II. 재·보궐선거 결정요인 분석모형

이 절에서는 조진만 外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재·보궐선거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모형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조진만 外의 연구와 동일한 분석모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모델의 측면에서 특별히 추가된 사항은 없다. 다만 선행연구를 읽지 않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

하게나마 모델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절을 서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조진만 외의 연구를 직접 참조하길 바란다. 한편 이 절에서는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이루어질 것이다.

## 1. 이론적 논의

재·보궐선거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중간평가 모델이다(Boston 1980; Butler 1949; Kay 1981; King 1988; Lewis 1943; Mughan 1988; 1986; Studlar and Sigelman 1987). 이는 중앙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재·보궐선거의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재·보궐선거는 지역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역적 이슈가 아니라 중앙정치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가 투표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가?

이 모델에 따르면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의 결과처럼 유권자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재·보궐선거의 경우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강원택 2010; Buchanan and Tullock 1962). 즉 이 경우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당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권자는 투표결정의 기준을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와 집권세력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 삼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경우 야당이나 야당 후보들이 재·보궐선거의 핵심 아젠다를 대통령과 여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여당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양상을 띠고 재·보궐선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조진만 2005). 결국 이 모델에 따르면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지역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재·보궐선거 결정요인에 대한 두 번째 모델은 선거운동 모델이다(Cook and Ramsden 1973; Norris 1990; Pollack 1941; Sparks 1940). 이 모델에 따르면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선거구의 정당 간 우열, 후보들의 능력

및 지역적 선거전략과 같은 지역적 특성들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주의가 이러한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가 특정 정당의 지역적 기반에서 실시되는 경우 당연히 그 정당이 다른 정당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델은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중앙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 모델은 투표율 모델이다(Born 1990; Campbell A. 1960; Campbell J. 1987; 1993; Cover 1985). 이 모델은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중앙정치나 지역정치와는 큰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이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하였던 많은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재·보궐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여당은 적은 표를 획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이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대체로 패배하거나 고전하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조진만 외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에 입각하여 세 가지 모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보궐선거 결정요인 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 통계분석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통계분석모델

조진만 외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세 가지 이론적 논의가 한국의 재·보궐선거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실성을 가지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이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계분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이 모델은 세 가지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고 있는 다섯 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모델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V = \alpha + \beta_1 * \text{대통령 지지율} + \beta_2 * \text{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소비자태도지수)} + \beta_3 * \text{선거구 특성(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 + \beta_4 * \text{선거상황(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조 여부)} + \beta_5 * \text{투표율 차이(이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 재·보궐선거 투표율)} + \varepsilon$$

먼저 종속변수  $V$ 는 가변수로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승리 여부를 의미한다. 여당 후보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경우 1로, 패배한 경우 0으로 코딩되었다. 중간평가 모델의 논의를 반영하고 있는 독립변수는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두 가지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통령 지지율로 구체화되어진다(가상준 2005). 즉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높게(낮게) 평가하는 경우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 지지율은 각종 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Campbell 1993; Lewis-Beck and Rice 1984; 1982; Shapiro and Conforto 1980), 따라서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변수는 리서치앤리서치(R&R)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능력을 월별 단위로 조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대통령 지지율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중간평가 모델을 반영하는 두 번째 변수는 유권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이다. 구체적인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논쟁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선거시점의 경제적 상황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연구들에 의하여 이미 확인되어왔다(이현우 1998; 황아란 2000; Abramowitz 1985; Erikson 1989; Fiorina 1978; Hibbs 1987; Kiewiet 1981, 1983; Kinder and Kiewiet 1979; Kuklinski and West 1981; Lewis-Beck 1988; Tufte 1975). 예를 든다면 유권자들이 자신이나 국가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책임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물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이유로 선거에서 여당 후보들이 고전하거나 패배할 확률이 높다. 만약 재·보궐선거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닌다면 선거가 시행되는 시점의 경제적 상황은 선거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변수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분기별로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를 사용하였다.<sup>1)</sup> 이 지수는 기준값이 50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값이 50을 넘는

1) 경제상황에 대한 지표는 매우 다양한 지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만 외(2006)가 이 지표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유권자들의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 그리고 회고적 차원과 전망적 차원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본

경우 유권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반대로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경제상황에 대하여 비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선거운동 모델을 반영하는 독립변수는 선거구 특성과 선거상황 두 가지이다. 우선 선거구 특성 변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 변수는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지역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다. 즉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가 여당에게 지역주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지역인지 혹은 경합지역인지 여부이다. 한국의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당에게 유리한(불리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여당의 승리 가능성은 올라갈(떨어질)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은 재·보궐선거 직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는지 여부이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선거구는 여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거환경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여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 특성 변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표 1>의 분류기준에 따라 측정되었다.

재·보궐선거가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치러지고 이전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3으로,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이전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1로, 나머지 값은 2로 측정되었다. 이 변수는 여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과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

<표 1> 재·보궐선거 선거구 특성 분류기준표

지역주의 현직	여당 불리 지역주의	지역주의 없음	여당 유리 지역주의
야당 현직	1	2	2
여당 현직	2	2	3

연구는 조진만 외의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모델에 포함시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표 2〉 정권별 여당 불리/유리 지역 분류기준표

정권	여당 불리 지역	여당 유리 지역
김영삼 정권	호남	부산·경남
김대중 정권	영남	호남
노무현 정권	영남	호남
이명박 정권	호남	영남

면 여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여당에 대한 불리·유리 지역은 〈표 2〉의 분류기준표에 제시되어 있다.<sup>2)</sup> 이 기준표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여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선거구는 여야 경합지역으로 분류된다.

선거운동 모델을 반영하고 있는 두 번째 변수인 선거상황 변수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또는 야당에서 선거연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통하여 측정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당시 DJP 연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연합이 깨지기 전까지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은 각종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선거전략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경우처럼 여러 정당이 연합하여 단일 후보를 내는 것은 이 후보가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변수는 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공조를 하여 단일 후보를 내세웠을 경우 1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공조가 없었던 경우 2로, 여당이 선거공조를 하였을 경우 3으로 측정하였다.

재·보궐선거 결과를 설명하는 세 번째 이론적 논의는 투표율 모델이다. 이 모델의 논의를 반영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이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에서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뺀 차이로 측정되었다. 재·보궐선거 투표율과 비교하여 이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 크면 클수록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였던 유권자들이 재·보궐선거에서 기권하는 일이 보다 자주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여당에 대한 불리·유리 지역을 〈표 2〉와 같이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진만 외(2006)의 84-85쪽을 참조하시오.



따라서 투표율의 차이가 커질수록 여당 후보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3. 추가된 재·보궐선거 데이터

조진만 외의 연구에 포함된 재·보궐선거 이후 2011년까지 총 7회에 걸쳐 30건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 중 2007년 4월 26일 치러진 대전 서구(乙)과 전남 무안·신안, 2010년 7월 28일 치러진 광주 남구, 그리고 2011년 4월 27일 치러진 전남 순천 재·보궐선거에서는 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후보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sup>3)</sup>

새로이 추가된 데이터에서 선거공조가 일어난 경우는 세 차례였다. 하나는 2009년 4월 29일에 울산(北)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에 대하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운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2010년 7월 28일 서울 은평(乙)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 중 하나인 이재오 후보가 이 지역에 출마하자 야당은 장상 민주당 후보로 후보를 단일화하여 선거공조를 이루어냈다. 세 번째 경우는 2011년 4월 27일 경남 김해(乙)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로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 대하여 야당들이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로 후보를 단일화한 경우이다.

데이터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의 지역적 기반에 관련된 사항이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하여 여권은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으로 분리되었고, 따라서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두 개의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지지가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 열린우리당이 호남지역의 선거에

3) 조진만 외(2006)의 연구에서도 여당이 후보를 세우지 못한 재·보궐선거 세 건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76쪽의 각주 4)를 참고). 이처럼 여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재·보궐선거를 분석에서 제외한 것은 통계분석 모델의 중요한 독립변수 중 하나인 투표율 차이를 측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재·보궐선거는 어차피 통계분석에서 결측값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 창출되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청산 차원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연고를 강조하기보다는 전국정당의 기치를 중요하게 내세웠다는 점도 호남지역을 열린우리당이 유리한 지역으로 간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호남지역을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데이터에 포함된 노무현 정권 당시 호남지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2006년 10월 25일에 실시된 해남·진도 재·보궐선거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sup>4)</sup> 사례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호남지역을 열린우리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코딩을 해도 전체 결과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의 논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해남·진도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구 특성 변수를 여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코딩하지 않고 경합지역으로 코딩하여 분석해보기도 하였다. 분석결과는 코딩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sup>5)</sup>

둘째, 노무현 정권은 호남지역의 맹주였던 김대중 정권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2002년에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확보하였던 바 있다. 또한 이념적·정책적으로도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과 비슷한 측면이 많았다. 새천년민주당과 분당함으로써 호남지역의 지지가 분산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지역주의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함으로써 선거전략적 차원에서 호남지역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을 이어받았다는 점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 이렇게 볼 때 호남지역이 열린우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라고 주장하

4) 전술한 대로 2007년 4월 26일 치러진 전남 무안·신안 재·보궐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제외되었다.

5) 비슷한 상황이 이명박 정권에서도 재연된 바 있다. 왜냐하면 친박연대가 등장하여 영남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4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친박을 표방한 정수성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인 정종복 후보를 꺾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분석에 포함된 전체 데이터에서 한 차례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전체 결과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열린우리당에 가장 우호적인 지역이라는 점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III. 변화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다음의 <표 3>은 제2절에서 논의되었던 재·보궐선거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모델에 입각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3>에서 조진만 외의 결과는 2006년 발표된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어 놓았다. 새로운 모델의 결과는 조진만 외가 사용한 데이터에 새로운 재·보궐선거 데이터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다. 조진만 외의 모델은 여당 후보의 당락 여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84.5%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모델은 76.2%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모델은 카이제곱 값이나 -2로그우도 값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델의 적합성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만 외의 연구결과와 새로운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기 전에 먼저 두 개 모델의 개별적 결과에 대한 해석부터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조진만 외의 연구결과는 총 다섯 개의 독립변수 중 두 개의 변수, 즉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구 특성 변수만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선거구 특성이 여당에게 유리(지역주의+여당 현직)하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선거공조 여부(선거상황 변수), 투표율 차이는 재·보궐선거 결과에 별 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구 특성의 승산비(odds ratio)를 살펴보면 전자가 1.061, 그리고 후자가 40.788로 나타나 선거구 특성이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조진만 외의 연구결과는 중간평가 모델과 선거운동 모델이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일정 부분 적실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역주의와 같은 선거운동 모델의 영향력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표 3〉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에 대한 신규(新舊)모델 분석결과 비교

독립변수	조진만 外 모델		새로운 모델	
	회귀계수 (표준오차)	Exp (β)	회귀계수 (표준오차)	Exp (β)
대통령 지지율	0.059(0.027)*	1.061	0.048(0.016)**	1.050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0.009(0.057)	0.991	0.069(0.050)	1.072
선거구 특성	3.708(1.384)**	40.788	1.704(0.716)*	5.497
선거상황	0.204(1.034)	1.226	0.085(0.717)	1.089
투표율 차이	-0.065(0.055)	0.937	0.015(0.031)	1.015
상수	-10.507(4.132)*		-9.809(3.483)**	
카이저승	23.347(p=0.000)		24.273(p=0.000)	
-2로그우도	42.959		74.345	
사례수	58		84	
적중률	84.5%		76.2%	

\*: p&lt;0.05, \*\*: p&lt;0.01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고 있는 변수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새로운 모델은 조진만 外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다섯 개의 독립변수 중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구 특성만이 여당 후보의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두 변수의 회귀계수의 부호도 조진만 外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새로운 모델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선거구 특성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지지율의 승산비(1.050)와 비교하여 선거구 특성의 승산비(5.497)가 더 크기 때문에 조진만 外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간평가 모델보다는 지역주의와 같은 선거운동 모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면 유사해보이는 두 모델의 결과 안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숨겨져 있다. 새로운 모델의 선거구 특성 변수의 회귀계수와 승산비는 각각 1.704와 5.497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진만 外의 결과(회귀계수: 3.708, 승산비: 40.788)와 비교하여 그 수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진만 外의 연구결과

와 비교하여 새로운 모델에서 지역주의가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조진만 외의 모델과 새로운 모델은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었거나 기존의 변수를 제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통계모델이다. 두 모델의 한 가지 차이는 새로운 모델에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시점에 실시되었던 재·보궐선거 데이터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는 선거구 특성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은 한국의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발견은 <표 3>의 분석결과에 입각하여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구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여당 후보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표 4>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6)</sup> <표 4>는 조진만 외가 발표한 연구결과와 새로운 모델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계산한 여당 후보의 승리

<표 4>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 신규(新舊)모델 결과 비교

		조진만 외 모델						
선거구 특성	대통령 지지율	20	30	40	50	60	70	80
여당 유리 비경합적 선거구 (N=4)		85.8	91.6	95.2	97.3	98.5	99.1	99.5
여야 경합적 선거구 (N=41)		12.9	21.1	32.5	46.5	61.0	73.9	83.6
여당 불리 비경합적 선거구 (N=13)		0.4	0.7	1.2	2.1	3.7	6.5	11.1
		새로운 모델						
선거구 특성	대통령 지지율	20	30	40	50	60	70	80
여당 유리 비경합적 선거구 (N=8)		38.0	49.1	60.6	71.1	79.8	86.3	90.9
여야 경합적 선거구 (N=60)		10.0	14.9	21.9	30.9	41.8	53.4	64.8
여당 불리 비경합적 선거구 (N=16)		1.9	3.1	4.9	7.5	11.5	17.3	25.1

6)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구 특성의 변화에 따라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조진만 외(2006), 87쪽을 참조하시오.

확률을 비교하고 있다.

조진만 外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 머문다 하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실시된다면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무려 85.8%에 달한다. 거꾸로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여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육박한다 하더라도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단지 11.1%에 불과하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에 입각하여 계산된 여당 후보의 승리 확률은 조진만 外의 결과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라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20%에 머물고 있다면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3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해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재·보궐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새로운 모델에서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조진만 外의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진만 外의 결과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달하였을 때 여당에게 불리한 지역구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11.1%에 지나지 않았으나 새로운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25.1%로 나타나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여야 경합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을 비교해보면 조진만 外의 결과와 비교하여 새로운 모델의 결과에서 승리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율이 50%인 경우 여야 경합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조진만 外 모델에서는 46.5%, 그리고 새로운 모델에서는 30.9%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야 경합지역에서 여당이 승리하기가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영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지역균열의 영향

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주의의 영향을 적게 받은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간평가적 요인들이 그 결과를 결정짓는데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한 대안적 해석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재·보궐선거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였다는 독특한 상황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당시 각 대통령 지지율의 평균과 소비자태도지수의 평균을 확률계산 공식에 대입하여 산정한 여당 후보의 승리확률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표 5〉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여야 경합적 선거구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겨우 11.7%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들이 승리할 확률은 28.9%로 나타나 열린우리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

정권 \ 선거구 특성	여당 불리 선거구	여야 경합적 선거구	여당 유리 선거구
노무현 정권	2.3	11.7	42.2
이명박 정권	6.9	28.9	69.2

7) 노무현 정권 당시 소비자태도지수 평균은 45.3이었으며, 이명박 정권의 소비자태도지수 평균은 51.28이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인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명박 정권 당시 소비자태도지수는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35.3%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2.75%이었다. 2003년 4월 24일에 치러진 두 건의 재·보궐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72.1%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21.6%~31.6%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어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5〉에서 노무현 정권 당시 여당 후보의 승리 확률은 이상치(outlier)인 72.1%를 뺀 나머지 지지율의 평균(27.9%)을 대입하여 계산한 것이다. 72.1%를 포함하여 계산한 지지율 평균값으로 확률을 구한 값은 다음과 같다: 여당 유리 선거구=50.9%, 여야 경합적 선거구=15.9%, 여당 불리 선거구=3.3%.

이러한 차이는 대통령 지지율과 소비자태도지수의 측면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이 극히 초라한 성적을 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지지율도 낮고 경제상황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전패할 수밖에 없었고, 여야 경합지역에서 여당 후보들의 당선 확률이 전체 모델에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진만 외의 연구결과를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여 반복적으로 연구한 이 논문의 결과는 지역주의가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직도 크기는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히 위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인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약화 현상이 재·보궐선거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경험적 증거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주장이 지니는 설득력을 보다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 IV. 결론: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

조진만 외의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재·보궐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하여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결과가 재·보궐선거 결과의 측면에 있어서 함축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결과는 과거와 비교할 때 오늘날 중앙정치적 이슈가 재·보궐선거 결과에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적 연고에 입각하여 ‘묻지마 투표’를 하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약화된다면 그 반작용으로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업무성과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아직까지도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재·보궐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정치적 요소가 여전히 적실성을 가진



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지나는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중앙정치적 요소의 중요성이 확장될 가능성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가능성은 사실 이미 현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과 소비자태도지수가 형편없었던 노무현 정권 당시 여당은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측면에 있어서 훨씬 높은 성적표를 받은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여당이 21건의 재·보궐선거에서 8번이나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향, 즉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특성이 중요해지는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부터는 조진만 外와 본 연구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려해봄으로써 향후 연구과제들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모델이 여당 후보의 당락 여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76.2%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미 기술한 바 있다. 적중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이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계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현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의 측정방식을 좀 더 세련화시키는 방법이다. 즉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임으로써 전체 모델의 잔차(*error term*)를 감소시켜 모델의 예측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 모델에서 측정방식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는 변수는 선거구 특성 변수이다. 전술한 대로 이 변수는 지역주의와 여당 현직 여부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측정되어 있다. 두 차원 모두 선거구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두 차원은 서로 다른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굳이 하나의 변수로 통합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 변수를 두 개의 변수로 나눈다면 하나의 변수는 지역주의 변수로서 지역적으로 여당에게 불리/경합/유리한 지역구를 <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측정하여 만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지역주의적 차원을 떠나서 여당에 유리한 선거구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 신림,

8)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재·보궐선거 결과를 설명하는 대안적 이론인 투표율 모델이 적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구로 등에 있는 선거구에서는 특정 정당의 후보가 지속적으로 당선되고 있다. 이러한 선거구들은 영남과 호남 지역 중심의 지역주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특정 정당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 공간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당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선거구가 될 수 있다. 특정 선거구가 여당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전체 통계모델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9)</sup>

둘째, 기존의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새로운 변수들을 모델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변수로 인물 변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2007년 4월 25일 대전 서(乙)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투입되어 선거유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또한 2010년 7월 28일 서울 은평(乙)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야당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대응하였지만 이명박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후보의 벽을 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충남 천안(乙)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논쟁으로 인하여 충청지역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극히 악화된 상황에서도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 무난히 당선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1년 4월 27일에 실시된 경기 성남 분당(乙)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후보로 출마하여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였던 강재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기도 하였다. 경기 성남 분당(乙) 선거구의 경우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초강세를 보인 지역으로 이전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당선자가 71.1%의 매우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손학규 후보의 승리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어떤 인물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여당 후보의 당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물 변수를

9) 물론 두 변수는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영남과 호남 지역의 재·보궐선거구가 겹치기 때문에 서로간에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결과적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1993년부터 현재까지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70.7%가 영남과 호남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작화하여 모델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치화시킬 것인가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이 변수를 모델에 포함시키기가 그리 수월치만은 않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선거구에 살고 있는 유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권자 개인 차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조진만 외와 본 연구는 집합자료를 활용하여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행위는 본질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가상준. 2005. “대통령 지지율과 2004년 대통령선거: 1952-2000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1. 153-174.
-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파주: 나남.
- 박명호. 2009.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효과와 연령효과에 관한 분석: 386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1. 65-86.
- 박상훈. 2001.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제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35-2. 113-134.
- 박찬욱. 1993.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 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이갑윤. 1997.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_\_\_\_\_. 2002.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과 국제정치』 18-2. 155-178.
- 이남영. 1998. “유권자의 지역주의 성향과 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_\_\_\_\_. 1999. “1998년 지방선거와 지역주의: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비교의 관점에서.”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조진만. 2005.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한국정당학회보』 4-2. 95-122.
-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2. 75-100.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 황아란. 2000. “경제투표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접근: 제15대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193-212.

Abramowitz, Alan I. 1985. “Economic Conditions, Presidential Popularity, and Voting

- Behavior in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47-1: 31-43.
- Born, Richard. 1990. “Surge and Decline, Negative Voting, and the Midterm Loss Phenomenon: A Simultaneous Choic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3: 615-645.
- Boston, Jonathan. 1980. “By-Elections in New Zealand: An Overview,” *Political Science* 32-2: 103-127.
- Buchanan, James, and Gordon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Press.
- Butler, David. 1949. “Trends in British By-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11-2: 396-407.
- Campbell, Angus. 1960. “Surge and Decline: A Study of Electoral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4-3: 397-418.
- Campbell, James E. 1987. “The Revised Theory of Surge and Declin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4: 965-979.
- \_\_\_\_\_. 1993. *The Presidential Pulse of Congressional Elections*. Lexington: Kentucky University Press.
- Cook, Chris, and John Ramsden, eds. 1973. *By-Elections in British Politics*. London: Macmillan Press.
- Cover, Albert D. 1985. “Surge and Decline in Congressional Elections,”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8-4: 606-619.
- Erikson, Robert S. 1989. “Economic Conditions and the Presidential Vo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2: 567-573.
- Fiorina, Morris P. 1978. “Economic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A Micro-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2: 426-443.
- Hibbs, Douglas A. Jr. 1987.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ay, Barry J. 1981. “By-Elections as Indicators of Canadian Voting,”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4-1: 37-52.
- Kiewiet, Roderick D. 1981. “Policy-Oriented Voting in Response to Economic

- Issu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2: 448-459.
- \_\_\_\_\_. 1983. *Macroeconomics and Micropolitics: The Electoral Effects of Economic Issue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Kinder, Donald R., and Roderick D. Kiewiet. 1979. "Economic Discontent and Political Behavior: The Role of Personal Grievances and Collective Economic Judgments in Congressional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3: 495-527.
- King, Anthony. 1988. "Why All Governments Lose By-Elections." *New Society* 11: 413-415.
- Kuklinski, James H., and Darrell M. West. 1981. "Economic Expectations and Voting Behavior in United States Senate and House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2: 436-447.
- Lewis, E. G. 1943. *British By-Elections as a Reflection of Public Opin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Political Science.
- Lewis-Beck, Michael S. 1988. *Economics and Elections: The Major Western Democracies*. Michigan: Michigan University Press.
- Lewis-Beck, Michael S., and Tom W. Rice. 1984. "Forecasting U.S. Hous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9-3: 475-486.
- Mooney, Christopher Z., and Robert D. Duval. 1993. *Bootstrapping: A Nonparametric Approach to Statistical Inference*.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 Mughan, Anthony. 1986. "Toward a Political of Government Vote Losses in Midterm By-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3: 761-775.
- \_\_\_\_\_. 1988. "On the By-Election Vote of Governments in Britai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3-1: 29-48.
- Norris, Pippa. 1990. *British By-Elections: The Volatile Elector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ollock, James K. 1941. "British By-Elections Between the Wa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5-3: 607-619.
- Shapiro, Robert Y., and Bruce M. Conforto. 1980. "Presidential Performance, the Economy, and the Public's Evaluation of Economic Conditions." *Journal of Politics* 42-1: 49-67.

- Sparks, John C. 1940. "British By-Elections: What Do They Prov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4-1: 97-104.
- Studlar, Donley T., and Lee Sigelman. 1987. "Special Elections: A Comparative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2: 247-256.
- Tufte, Edward R. 1975. "Determinants of the Outcomes of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3: 812-826.

투고일: 2011년 6월 21일, 심사일: 2011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11년 7월 26일

## ABSTRACT

# The Changing National Assembly By(Re)-Elections: National Politics vs. Regionalism

Jun Young Choi · Jinman Cho | Inh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if the weakening regionalism hypothesis can be applicable to the national assembly by(re)-elections in Korea.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replicates Cho, Choi, and Ka's study(2006) that depended on the data when the regionalism was regarded as being powerful in Korean elections. By utilizing the updated data covering the period that recent studies discovered the weakening regionalism phenomenon in the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is study finds that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is still alive and kicking in the by(re)-elections but its relative power has been significantly weakened compared to the findings of Cho et al.'s.

These findings can be another evidence to the weakening regionalism hypothesis and thereby enhancing the persuasiveness of the hypothesis.

---

**KeyWords** | Korea, By-Election, Re-Election, National Politics, Regionalism